

보건의료 정책방향과 건강보험제도

윤희숙
KDI 국제정책대학원



Q1.건강보험의 본질적 목표는?

A. 전국민의 필수의료보장

Q2. **그렇다면, 필수의료 ,
비필수의료, 필수성여부를 아직
가늠하기 어려운 의료가 혼재하고
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는?**



**① 필수의료를 파악해
보장한다**

② 모든 의료를 보장한다



① 필수의료료 파악해 보장한다

- 건강보험 benefit package 구성의 문제
- 판단을 위한 원칙 정립, 방법론의 연구 축적 및 동의가 필요
- 비급여 영역은 건강보험 보장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이상 건보영역 역량 투입은 불필요

② 모든 의료료 보장한다

-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편입 (건강보험 선적용하고 본인부담을 30/50/70/90 차등)
- 비급여 영역의 과도한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공적인 통제 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



관련쟁점

모든 의학적 비급여는
(보상정도의 차이가
있을지언정) 모두 급여에
포함될만하다


부작용이 일부 있더라도
비급여를 정부 통제하에
편입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

“ ”
...

계속 비급여로 남아 있어야
할 항목도 많다. 미보장
필수의료를 구체적으로
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


정부가 비급여 가격을
책정하는 것은 향후의 가격
하락을 미리 배제하는
것이다.

비급여를 정부가 파악하고
관리한다는 것이 건강보험을
통한 보상일 필요는 없다



관련 쟁점을 건강보험발전의 맥락에서 살펴보면,

- 1977 ~ 1989년 전국민 포괄로 빠른 발전
- 빈약한 정부 재정으로 다보험자체계 도입했으나, 사회보험체계의 요건인 '정부와의 거리유지' 특성은 부재
- 2000년 건강보험 통합, 2003년 재정통합으로 전국민 포괄하는 단일보험자 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 국가제도로서의 성격 더 뚜렷해졌음.
 - 반면, 이질적 집단 통합으로 인한 부과체계 설계상의 문제 잔존
- 반면, 민간자본 주도의 의료시스템 속에서 의료정책과 의료공급자간의 연계 및 공조 낮으며, 의료수요자들은 높은 수준의 선택가능성을 당연시, 공급자간 경쟁논리 우선
- 의료정책 전반이 '건강보험 급여와 보상'에 치중됨으로써 건강보험 외 영역에서의 의료정책 기획이 부실하고 정책수행경로가 미개발
- 저부담저급여 설계







문제해결을 위한 그간의 시도 및 미완의 과제

- 의료전달체계 (1989) : 기계적 설계로 실패
- 부과체계 개편 (2016) : 성과
- 일차의료 강화/만성질환
관리/감염병대응체계 확립 노력: 미흡
- 의료서비스 시장 파악 정도는 낮으며,
정책인프라 미비: 매우 미흡
- 공공병상 70% : 기폐기
- 보장성 70% : 변화된 환경 고려 재설계 필요

그간의 환경 및 기대수준 변화

- 고령화 및 소득수준 상승으로 인한 의료수요 구조변화 및 기대수준 변화

선택 진료	상급 병실	간호 · 간병 통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● 선택진료 전면폐지(’18) <p>의료질평가 지원금 확대, 고난이도 시술 및 중환자실 수가 인상 등</p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● 2~3인실 건보적용(’18)● 1인실 적용(’19)  <p>- 중증 호흡기 질환자, 산모 등 필요한 경우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● 간호 · 간병통합서비스 확대(’22년 10만병상)● 간호인력 수급대책 마련 병행(’17)  

- 의사인력의 노동강도는 환자안전의 문제 시사
- 고령화로 인한 건보 재정압력: 더구나 재정목표 자체가 부재한 특수한 상황
- 비급여 시장과 의료적 필수성간 괴리 심화

- 질적변화 및 고비용구조로의 전환을 설계 중
- 환자중심, 가치기반중심 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 및 실질적 정책수단 확보 등 세부과제 산재





문제점 인식에 부합하는 추진과제

- 환자개인을 초점에 둔 보장성 강화
 - 예비급여 도입과의 부합정도 낮음
 - 비급여영역 파악을 강화, 보장률 개념 재구성할 필요
-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개선 및 전달체계 개선, 공공서비스, 예방적 건강관리, 질기반 보상 체계 확립, 시장 및 비급여 파악 (Tax-based 의료정책 강화)
- 인력 문제 : 의사인력 수급전략 필요
- 건보재정관리 목표 및 전략 수립 필요